

진실화해위원회<조사보고서>패시 분류체계 개발

Developing a Facet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Investigation Report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강변구(Byungu Kang)¹, 김수정(Soojung Kim)²

E-mail: rilover@naver.com, kimsoojung@jbnu.ac.kr



1 제1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논문접수 2025.07.17
최초심사 2025.07.23
게재확정 2025.08.22

ORCID

Byungu Kang
https://orcid.org/0009-0006-7576-5018

Soojung Kim
https://orcid.org/0000-0002-0490-314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조사보고서>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가 수행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 결과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보고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폭력 사건의 다면적 속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분류와 검색이 가능한 패시(facet) 분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랑가나단의 PMEST 패시를 기초로 임시 기본 패시를 설정하였다. 둘째, 이용자 면담조사를 통해 현행 <조사보고서> 검색 기능의 개선 사항 및 유용한 검색 속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조사보고서>로부터 수집한 용어를 종합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패시 분류체계(안)를 제시하였다. 이 패시 분류체계(안)는 6개의 기본 패시(가해 주체, 사건 유형, 가해 유형, 발생 지역, 발생 시기, 진실규명 결정 여부)으로 구성하였고, 패시에 따라 중분류 혹은 소분류까지 포함하여 정교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ABSTRACT

The Investigation Reports produced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resent the most comprehensive state-led investigations into historical incidents of injustice, serving as crucial records that uncover the truth and establish state accountabil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facet classification system that effectively reflects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state violence cases and enables more precise categorization and retrieval to enhance the usability of these report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established provisional basic facets based on Ranganathan's PMEST facets. Second, user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dentify areas for improving current search functionalities and to determine practical search attributes. Third, terminology extracted from the Investigation Reports was synthesized and hierarchically structured to formulate a draft facet classific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six primary facets: perpetrating entity, incident type, type of violation, location, time of occurrence, and truth-finding determination status. Some facets include secondary and, where appropriate, tertiary categories to support more granular and refined searching.

Keywords: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과거사, 국가폭력, 패시 분류체계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vestigation Report, Past history, State violence, Facet classification syste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기존의 과거사 진상규명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에서 조사가 미진했던 과제를 포함해 일체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2005~2010) 이후 공백기를 거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하였지만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올해 11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피해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활동 종료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 일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기록물 가운데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집약된 결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이 이관된 때부터 현재까지 〈조사보고서〉의 원문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사본 신청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기록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유지된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조사보고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역시 기관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서 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은 〈조사보고서〉에 집약된다. 또한, 진실규명 이후의 학술연구, 교육, 추모 등의 후속 과제는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사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기관의 목적 달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조사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는 1기, 2기 위원회가 생산한 사건별 〈조사보고서〉 936건(경정결정 제외)이 특정한 논리적 질서 없이 단순히 조사 완료 순으로 게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해당 게시판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는 〈조사보고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키워드 검색 기능도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사건 발생 지역이나 사건 유형 등을 어느 정도 알아야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결과로 나온 보고서와 동일한 유형·발생 지역·발생 시기 등에 해당하는 유사 사건으로 확장하여 탐색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보고서〉의 내용, 즉 국가폭력 사건을 다면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속성들을 도출하고, 단독 또는 결합된 속성을 검색조건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실화해위원회 사건별 〈조사보고서〉의 내용적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폭력 사건의 다면적 속성을 도출하고 속성들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사보고서〉의 효과적인 분류와 검색 이용을 지원하는 패싯(facet)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의 패싯 분류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1기·2기 위원회의 사건별 〈조사보고서〉 936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보고서〉의 일반적 현황 및 사건 조사 기록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보고서〉에 패싯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근거로서 분류 대상 기록의 내용인 국가폭력 사건의 복합적 성격과 그에 적합한 분류

방식의 필요성, 이용자에게 주제 브라우징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였다.

패킷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랭가나단의 PMEST 범주와 사건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시 기본 패킷을 정하였다. 둘째, 임시 기본 패킷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등 내부 이용자와 연구자·활동가 등 외부 이용자 대상으로 서면 질문지를 활용한 면담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현재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검색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패킷을 결정하였다. 셋째, 각 패킷의 세부분류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조사 범위 및 그에 따른 조사국의 업무 분장, 1기 위원회 조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 1기·2기 위원회의 사건별 <조사보고서>의 결정문으로부터 용어를 수집하였다. 넷째, 수집된 용어들을 범주화하고, 각 패킷 내에서 세부분류를 계층적 구조로 제시함으로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패킷 분류체계(안)를 제안했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과거사 진상 조사 기록에 관한 연구, 패킷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사건의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 진상 조사 기록에 관한 연구는 크게 기록 관리 현황 및 개선점, 그리고 활용방안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주제인 <조사보고서> 분류체계에 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정희(2007)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기록의 가치와 개념,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배나경(2008)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한시 기구로서 해산 뒤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희연(2008)은 여러 과거사 기관에 분산된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흐름에서 이인주(2009)는 당시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된 17개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 과거사 사료관’ 건립을 제안했다.

과거사 위원회 기록 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강변구와 김수정(2024)과 우지원과 이영학(2011)은 조사기록을 활용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지원과 이영학(2011)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조사기록 가운데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해 콘텐츠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변구(2024)는 <조사보고서>를 내러티브 콘텐츠로 가공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폐지 후에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한시적 진상조사 기관이 연이어 설립되었고 이에 김민경 외(2019)는 관리(프로세스), 인력, 기록 인식을 중심으로 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철호(2021)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사례로 한시 조사기관에 맞는 기록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거사 또는 사회적 참사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기구가 한시기관으로서 활동 종료 후 자체 기록 관리 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으로 기록을 전량 이관한 뒤 그 기록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한편, 패킷 분류체계 개발 연구는 해당 주제의 성격을 표현하는 패킷과 그것을 도출한 방법이 중심 내용이다.

윤규빈 외(2023)는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선물 검색을 위한 패킷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대통령선물이 갖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대통령, 선물유형, 증정국, 증정년도, 증정인 등의 패킷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선물을 주는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사건을 구성하는 패킷으로

행위의 대상(선물)과 그 유형, 선물을 주는 행위자(증정국, 증정인)와 받는 피행위자(대통령), 시기(증정년도), 장소 등이 있음을 밝혔다.

박옥남 외(2009)는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문화예술 교육 기관, 맥락, 프로젝트의 목표, 영향 등 많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 뒤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이 결합된 복합식 접근법을 활용해 분류하였다. 하향식 접근법은 해당 주체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추출하고 세부적인 개념으로 분할해 간다. 반대로 상향식 접근법은 세부적인 개념을 종합해 일반적인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법률, 《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기존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건 분류법을 검토한 다음, 개별 사건보고서를 통해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보완했다.

심지영(2014)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적 접근점을 제공하는 패킷 분류 체계 개발을 위해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실 보도의 기본원칙인 육하원칙에 따른다는 점에 착안해 기본 패킷을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어디서(when)’, ‘언제(when)’로 도출하였다.

정연경(2013)은 한식 정보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패킷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패킷 추출을 위해 먼저 한식 분야 주제분석을 수행하고, 이어서 국내 한식 관련 도서 776권의 목차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디렉터리에서 한식 관련 항목으로부터 용어를 수집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본 패킷과 하위 패킷을 도출하고, 한식 용어 분류에 적용하여 패킷을 최종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임지훈, 박태연 외(2017)는 재난유형 패킷 분류체계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2011년 일본 동북부의 해저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어진 예를 들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표준 매뉴얼, 관련 홈페이지 등 기존의 재난 유형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난유리기관의 현용 분류체계의 현황 분석, 전문가 피드백, 재난 전문가 면담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패킷을 도출하였다.

2. <조사보고서>의 성격과 패킷 분류체계 적용 근거

2.1 <조사보고서>의 성격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 등 기록물을 ‘조사기록’과 ‘일반기록(역사기록, 참고자료 등)’으로 구분한다. ‘조사기록’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을 편철·정리한 기록물”을 가리킨다. 각 사건의 조사기록은 동일한 조사 절차에 따라 생산되고 사건 신청부터 의결 및 통보까지 모든 기록을 하나의 사건명 아래 편철한다. 개별 사건의 조사기록은 <진상규명신청서>, <검토보고서(사건조사계획서, 조사계획서)>, <소위원회 심의(조사개시, 각하, 사전조사 결정)>, <신청사건 조사(문헌, 진술청취, 현장실지조사 기록)>, <조사결과 보고서>,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기록>, <결정통지서>, <우편배달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기록물의 수량도 수 권에서 수십 권에 이른다(권미현, 2023).

조사기록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생산된다. 먼저 피해자의 <진상규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 사건이 조사국에 배당되고, 조사관은 신청사건 <검토보고서>(사건조사계획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국에서 소위원회의에 <소위원회 심의>를 제출하면 사건에 관한 조사개시 또는 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개시 결정된 사건에 대해 조사관은 신청인·참고인 진술조사 및 관련 기록조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다. 신청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담당 조사관이 사건의 배경, 경위, 결과, 권고사항 등을 서술하여 <조사결과보고서> 를 작성한다. 이후 <조사결과보고서> 는 소속 탐·과·국장의 검토를 거치고 상임위원 수정지시사항을 반영해 소위원회 및 전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사결과보고서> 는 제본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된다.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진술서, 문서 등의 조사기록은 사건의 증거로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되고,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규명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따라서 조사기록, 진실규명 의결, 결정통지서 등 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관해 생산·수집한 기록은 전체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 로 수렴된다. 본 연구에서 분류 대상이 되는 사건별 <조사보고서> 는 <조사결과보고서> 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위원회의 조사 및 진실규명 의결 과정이 집약된 핵심 기록물이다.

2.2 패킷 분류체계 적용 근거

본 연구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패킷 분류체계 적용을 제안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킷 분류는 <조사보고서> 의 내용인 국가폭력 사건의 다면적 특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분류 방식이다. 국가폭력 사건은 매우 긴 시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과거사정리법> 이 규정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에 걸쳐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까지 그 시기와 내용의 폭이 넓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가 전국에 걸쳐 있고, 사건 유형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간첩조작 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 형제복지원 등 수용시설 사건,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사건 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폭력이라는 주제가 갖는 다면적 속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패킷 분류는 하나의 분야를 어떤 분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패킷(facet)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다시 조합하는 분석적 합성식(analytico-synthetic) 분류 방식(오동근, 1998)으로 <조사보고서> 가 담고 있는 국가폭력 사건이 내포하는 다양한 속성을 패킷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패킷 분류체계는 이용자에게 주제 브라우징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윤규빈 외, 2023). 현재 위원회 홈페이지의 사건별 <조사보고서> 검색 화면에서는 <조사보고서> 가 1:2기 위원회별, 각 위원회 내 조사국별로 구분되며, 조사 완료된 순서대로 게시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검색 화면에서 이용자는 제목이나 지역·사건명 같은 제목의 키워드를 입력해 <조사보고서> 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사보고서> 를 미리 알고 있거나 지역, 사건명 같은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아는 자료를 찾는 방식이며, 이용자가 모르는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류 체계와 같은 구조화 도구가 필요하다(박지영, 2010). 특히 패킷 분류 체계는 해당 기록의 전체적인 지적 구조를 표현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브라우징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박도영, 2020). 따라서 <조사보고서> 를 사건 유형, 발생 지역, 발생 시기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주제의 사건들을 브라우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면 현재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킷 분류체계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폭력 사건을 분류체계 내에 수용하기에 용이하다. 국가폭력의 개념을 국가를 포함한 정치 집단이 “각종 차별과 불평등 관계를 창출·정당화·강화·변명하기 위해 시도하며, 국가가 묵인하거나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Nagengast, 1994, 114, 홍성흡, 2007, 재인용)으로 규정할 때 앞으로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때 기존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번호	조사국	제목	사건유형	결정유형	작성일
501	조사2국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경정결정)	3·15의거	경정결정	2025.04.29
500	조사2국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김○문 등 19명)	3·15의거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9	조사2국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김○백 등 10명)	3·15의거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8	조사2국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서○익 등 23명)	3·15의거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7	조사2국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박○일 등 10명)	3·15의거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6	조사2국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장○해 등 9명)	3·15의거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5	조사2국	남북귀환어부 김○규 반공법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4	조사2국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 침해 사건(故 배○지)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3	조사2국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9) - 무전호 등 1972. 9. 15. 귀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결정	2025.04.29
492	조사2국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이○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결정	2025.04.29

〈그림 1〉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사건별 조사보고서 검색 화면 출처: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716&upper_menu_no=300000&menu_no=380000

일부 다른 속성만 변형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유형이지만 과거의 사건과 공통된 속성을 지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패킷 분류체계는 처음 체계를 만들 때 모든 주제를 망라적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패킷을 다르게 조합하거나 새로운 패킷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오동근, 1998). 이러한 장점을 지닌 패킷 분류체계는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폭력 사건을 분류하는 데 적합하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에 패킷 분류체계 및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사건의 다면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검색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임시 기본 패킷 설정

문헌정보학 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2010)에서는 패킷을 “한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양상 중의 하나”, “분류법에서 하나의 특성으로 주제를 구분할 때 파생되는 하위분류 세트”로 정의한다. 박도영(2020)은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 “주제는 하나 이상의 관점, 특성,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다면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패킷으로 정의했다. 패킷 분석은 하나의 주제가 갖는 이러한 다면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랑가나단(Ranganathan)의 5가지 기본 패킷인 PMEST를 기초로 하여 5개의 임시 기본 패킷을 설정하였다. 랑가나단의 5개 기본 범주는 주제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Personality(개성), 재료인 Matter(물질), 행동 또는 활동을 뜻하는 Energy(에너지), Space(공간), Time(시간)으로 전 학문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오동근, 2020, 202).

3.1 사건의 구성 요소와 유형

PMEST의 기본 범주와 본 연구의 주제인 국가폭력 사건을 대응시키기 위해 먼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개별적인 사건들은 ‘실체’, 실체로부터 드러난 ‘속성’, ‘시간’으로 구성된다(Kim, 1995, 269, 박정희, 2005, 재인용). 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사건은 ‘소크라테스(실체)’, ‘감옥에서 죽었다(속성)’, 소크라테스가 죽은 ‘시간’으로 구성된다. 임지훈, 오효정 외(2017)는 사건아카이브를 정의하면서 사건이 ‘인물’, ‘공간’, ‘시간’의 3요소를 동시에 함유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인물’은 다시 ‘행위자’, ‘피해자’, ‘관찰자’로 구분된다.

위에서 말한 사건 요소들은 <조사보고서>의 국가폭력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사건은 인물, 공간, 시간의 3요소를 동시에 함유하며 인물은 다시 행위자(가해 주체), 피해자, 관찰자(목적자)로 구분된다. 또한 사건은 특정한 실체(가해 주체 등), 실체로부터 드러난 속성(가해 행위 등), 시간(사건 발생 시간), 발생 장소 등이 서술된다. 예를 들면,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9)—무진호 등 1972. 9. 15. 귀환> 보고서에는 <표 1>과 같은 사건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사건 속성 예시

인물	사건 발생 장소	사건 발생 시간	가해 행위
(피해자) 무진호 등 4척의 선박의 선원 93명	강릉 소재 구 법원청사 및 인근 삼흥여관	1972년 9월 15일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사, 형사처벌
(가해 주체) 속초경찰서 등 수사기관			

3.2 PMEST에 대응하는 <조사보고서>의 임시 기본 패킷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건의 속성은 인물(피해자, 가해 주체), 사건 발생 장소, 사건 발생 시간, 가해 행위, 사건 유형의 5가지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랭가나단의 PMEST 범주와 대응시켜 <조사보고서>의 임시 기본 패킷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P(개성)에 대응하는 <조사보고서>의 임시 기본 패킷을 인물 중에서 ‘가해 주체’로 설정하였다. 피해자는 하나의 사건에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데다 국가폭력 사건의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가해 주체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물질) 범주에는 ‘사건 유형’을 대응시켰다. 심지영(2014)은 뉴스 보도 영상의 경우 인물 혹은 사건(P)이 무슨 사항(M)과 관련되어 어떠한 형태(E)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어떤 가해 주체(P)가 하나의 사건 유형(M) 하에서 어떠한 가해 행위(E)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포괄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E(에너지) 범주는 ‘가해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S(공간) 범주에는 ‘발생 지역’을, T(시간) 범주에는 ‘발생 시기’를 각각 대응시켰다.

이상에서 랭가나단의 PMEST 범주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보고서>의 임시 기본 패킷 간의 대응 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PMEST에 대응되는 〈조사보고서〉의 임시 기본 패킷

PMEST	〈조사보고서〉
P(개성)	가해 주체
M(물질)	사건 유형
E(에너지)	가해 유형
S(공간)	발생 지역
T(시간)	발생 시기

4. 면담조사 결과

4.1 면담대상자 및 질문 내용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현재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검색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방식은 질문지를 통한 서면 조사로 2025년 6월 9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고, 내용 보완을 위해 면담 대상자 2명에게는 7월에 전화로 추가 질의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13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직원 8명과 외부 이용자 5명으로 구성했다(〈표 3〉 참조). 이 중 외부 이용자는 평소에 〈조사보고서〉 활용도가 높은 과거사 연구자, 기자, 과거사 전문 작가, 과거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포함하고, 내부 이용자는 조사관 3명, 조사관 외 직원 5명으로 구성했다.

〈표 3〉 면담 대상자 정보

번호	구분	직업/업무
1	내부 직원	조사관
2		조사관
3		조사관
4		대외협력담당
5		대외협력담당
6		대외협력담당
7		대외협력담당
8		기록관리담당
9	외부 이용자	연구자
10		연구자
11		연구자, 과거사단체 상근활동가
12		시민단체 대표, 작가
13		기자

질문 문항은 〈표 4〉와 같이 ① 응답자 기본 정보, ② 〈조사보고서〉 검색 현황, ③ 패킷 검색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보고서〉 검색 현황에서는 검색의 목적과 실제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물었다. 패킷 검색과 관련해서는 각 검색 속성(패킷)이 상세 검색 조건으로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질문하였다. 검색 속성에는 앞서 설정한 5개의 임시 기본 패킷(가해 주체, 사건 유형, 가해 유형, 발생 지역, 발생 시기) 외에 ‘사건 유형’을 세분화한 ‘하위 사건 유형’,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검색 접근점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정책’, ‘진실규명 결정 여부’, 마지막으로 현행 시스템에서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담당조사국’(1국, 2국)을 포함하였다.

〈표 4〉 질문 내용

영역	질문 내용	질문 유형
응답자 기본 정보	· 성명, 소속 부서, 직업/업무	단답식
<조사보고서> 검색 현황	· <조사보고서> 검색의 목적 · 검색 시 사용하는 정보 항목이나 키워드 · 검색 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 현재 사용 중인 <조사보고서> 검색시스템의 개선 사항	서술식
패킷 검색	· 상세한 검색을 위한 각 검색 항목의 유용성 (가해 주체, 사건 유형, 가해 유형, 발생 지역, 발생 시기, 하위 사건 유형, 담당조사국, 관련 법령 및 정책, 진실규명 결정 여부)	리커트 5점 척도

4.2 질문 항목별 응답 결과

4.2.1 검색 목적

“<조사보고서> 를 검색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위원회 내부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는데, 조사관의 경우 담당 사건에 따라 검색 목적에 차이를 보였다. 1기 위원회에서부터 조사범위에 포함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담당하는 A 조사관은 해당 분야의 특성상 “1기와 2기에서 같은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1기 보고서 및 기록 검토는 지역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사건 배경, 가해 주체 작성을 위해 1기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필수적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2기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기 사건은 ‘희생자 확인’을 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2기에 처음 조사된 수용시설 사건을 담당한 전직 B 조사관은 위원회 업무 초기에 조사보고서 양식을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보고서> 를 검색한다고 했다. 위원회 외부 이용자들의 경우 연구자는 ‘학술연구’, 과거사 단체 활동가는 ‘위령제 준비를 위한 자료조사’, 작가는 ‘피해자 유가족 증언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기자는 ‘취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색한다고 응답했다.

4.2.2 검색 항목 및 키워드

“<조사보고서> 검색 시 주로 어떤 정보 항목이나 키워드를 사용하십니까?”의 질문에 모든 이용자가 공통으로 ‘사건명’, ‘지역명’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보고서 제목이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 형무소제소자 희생 사건> (적다-342호 외 222건),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이○덕)> (2바-6286) 등과 같이 대부분 지역명과 사건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A 조사관은 “지역별로 업무담당자를 나누기 때문에, 지역을 배당받으면 그 지역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4.2.3 검색 시 어려운 점

“<조사보고서> 검색 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연구자나 조사관은 큰 불편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관 외 직원 이용자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답했는데, 보고서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을 뿐 본문 검색이 되지 않는 점, 낮은 검색 정확도(“조사 하나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름”, C 직원), 시군 단위의 개별 지역으로 검색되지 않는 점(“개별 지역이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로 묶이는 경우 있어 아쉬움”, D 직원) 등을 꼽았다. 외부 이용자들도 이와 유사한 불편 사항을 꼽았다. 추가적으로는 검색 결과가 사건 유형별로 정리되지 않는 점(E 활동가)을 꼽았다. 특히 F 기자는 현재의 조사국 단위 분류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국별로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4.2.4 검색 개선 사항

“효과적인 〈사건별 조사보고서〉 검색을 위해 개선 혹은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을 묻는 질문에 사건 유형, 진실규명 결정 여부, 지역별로 검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F 기자는 “민간인 학살/인권침해/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으로 먼저 구분하고(국별 구분과 같겠죠), 소분류(형무소 사건/보도연맹 사건/부역혐의 사건/미군에 의한 학살 등)가 한 번 더 지정 가능하게 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 검색이 가능한 아카이브 기능”(G 조사관) 등 내용 검색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4.2.5 〈조사보고서〉 검색에 관한 이용자 응답 분석 종합

이용자들은 〈조사보고서〉를 검색할 때 탐색적인 검색보다는 각자 업무 및 과업에 따라 명확한 목적을 갖고 그에 필요한 대상을 검색했다. 검색을 위해 지역명, 사건명 키워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의 중요성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보고서 제목 외에 검색 접근점이 제한적임을 반증한다. 이러한 검색 방식에 대해 조사관은 업무상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조사관 외 직원이나 외부 이용자들은 낮은 검색 정확도, 내용 검색 불가, 시군 단위 지역별, 사건 유형별 검색이 되지 않는 점을 불편 사항으로 답했다. 조사관의 경우 검색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검색 목적이 담당 사건과 관련 있는 1기 보고서를 검색하거나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는 정도라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검색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비해 언론 대응·홍보 업무, 학술 연구, 행사 준비, 콘텐츠 제작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조사보고서〉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은 내용, 사건 유형, 지역별 검색을 원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조사보고서〉가 사건 유형별, 시군 단위 지역별로 분류되고 각 보고서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검색되기를 원했다. 특히 정확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D 직원).

4.2.6 검색 속성의 유용성

다음으로 제목의 키워드 이외에 “더욱 상세한 검색조건을 원한다면 검색조건으로 아래의 각 속성이 어느 정도로 유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했다. 5단계 척도에 대해 ‘전혀 유용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유용함’(5점)까지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응답 빈도수와 곱하고 최종적으로 검색 속성별 평균값을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검색 속성 유용성 응답 결과

순위	검색 속성 (예시)	유용성 평균	순위	검색 속성 (예시)	유용성 평균
1	하위 사건 유형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등)	4.38	6	가해 유형 (가혹행위, 형사처벌 등)	3.53
2	사건 발생 장소 (시·도·군)	4.23	7	진실규명 결정 여부 (진실규명, 불능)	3.53
3	사건 유형 (민간인 집단 희생 등)	3.84	8	담당 조사국 (1국, 2국)	3.46
4	가해 주체 (군경, 정부기관 등)	3.84	9	관련 법령 및 정책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3.16
5	사건 발생 시기 (1950년대, 1960년대 등)	3.69		전체 평균	3.74

응답 결과에 따르면, ‘하위 사건 유형’이 4.3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현행 시스템에서 ‘사건유형’이 <조사보고서>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브라우저이나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다 세분화된 사건 유형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위 사건 유형’을 세분화하여 ‘사건 유형’ 패킷에 중분류/소분류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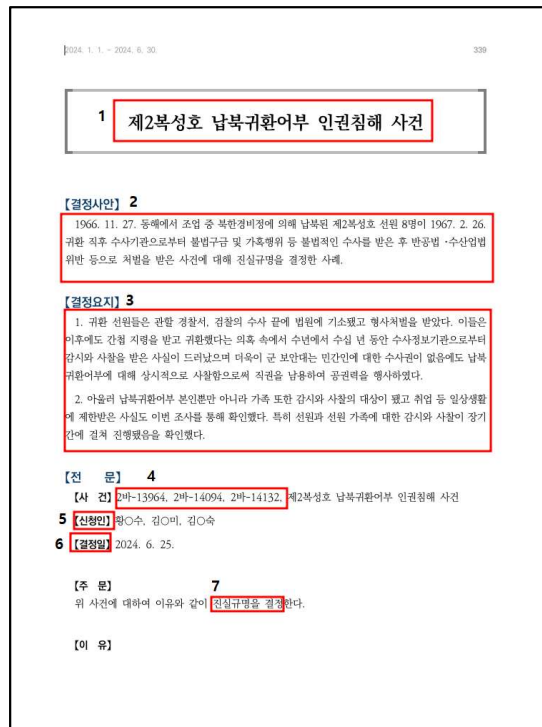
앞서 설정한 임시 기본 패킷 5개(‘가해 주체’, ‘사건 유형’, ‘가해 유형’, ‘발생 장소’, ‘발생 시기’)도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5개 패킷 외에 ‘진실규명 결정 여부’(3.53), ‘담당 조사국’(3.46), ‘관련 법령 및 정책’(3.16)이 보통(3점) 이상의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 여부’(3.53)는 면담에서 검색 조건으로 직접 언급되었기에 최종 패킷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담당 조사국’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종 패킷에서 제외하였다. ‘담당 조사국’의 경우 조사국의 업무가 ‘사건 유형’에 따라 분장되므로 기존 패킷과 중복되며, 사용자 답변 중 조사국별 구분 방식이 담당 업무를 모르는 외부 이용자들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경우 조사1국 사건을 담당하는 A 조사관에 따르면(추가 전화 질의 2025. 7. 11) 1국 사건의 경우는 ‘적법절차 없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통된 가해 위법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을 예로 들면 당시 좌익사상 소지 혐의자를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등이 있었으나 군과 경찰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였다. 반면에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부랑아 단속 정책》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적용하여’ 가해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조사보고서> 전체에 대한 일관된 검색 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최종 패킷은 ‘가해 주체’, ‘사건 유형’, ‘가해 유형’, ‘발생 지역’, ‘발생 시기’, ‘진실규명 결정 여부’의 6개로 구성되었다.

5. 패킷 분류체계(안)

최종 패킷 6개를 결정한 후, 각 패킷에 해당하는 용어를 수집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과거사정리법》, 조사국 업무 분장, 1기 위원회 《종합보고서》, 1·2기 위원회 <조사보고서>를 검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조사 범위’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조사국에서 업무 분장하고, 각 조사국의 조사관이 개별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보고서>에는 사건의 일시, 장소, 가해 주체, 사건의 배경 및 경과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까지 조사한 모든 사건별 <조사보고서>를 망라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보고서》는 사건을 시기별, 유형별로 정리하고 사건 유형별 가해 주체, 가해 행위 등을 분석한다. 그러나 《종합보고서》는 1기 위원회 조사 결과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2기 사건의 경우는 현재까지 2기 위원회가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용어를 수집했다.

개별 <조사보고서>에서는 결정문에서 용어를 수집했다. 결정문은 <조사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했음을 증명한다. 결정문 예시(〈그림 2〉)와 같이 사건의 제목과 위원회의 결정사안, 결정요지를 통해 사건의 가해 주체, 가해 행위, 발생 지역, 발생 시기에 속하는 용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수집된 용어는 기본 패킷에 따라 구분한 다음 《종합보고서》를 참고해 종합하고 계층화하는 과정을 거쳐 패킷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도출되었다.



〈그림 2〉 〈조사보고서〉 결정문 예시 (1.제목, 2.결정사안, 3.결정요지, 4.사건번호, 5.신청인, 6.결정일, 7.진실규명결정 여부)

5.1 가해 주체 패킷

《과거사정리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는 가해 주체에 대해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 주체는 1기 위원회 《종합보고서》 및 1·2기 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가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때 가해 주체를 확인하는 것은 핵심 조사 과제이므로 〈조사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가해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의 경우 ‘군경’, ‘적대세력’, ‘미군’ 등이 가해 주체로 나타난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 사건은 주로 경찰, 정보기관 등이 가해 주체인 것을 볼 수 있다. 2기에 처음 조사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의 방조 아래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은 수용시설 등이 가해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해 주체가 동시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대개 지역의 우익단체원이나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면사무소 창고, 경찰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헌병대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때 우익단체원, 경찰, 헌병대 가운데 누구를 ‘가해 주체’ 범주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때는 사건의 가장 주된 가해 행위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해 행위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살해’이며 그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유형이 결정된다. 따라서 ‘살해’ 행위를 한 주체가 군인지, 경찰인지, 혹은 둘 다인지에 따라 ‘가해 주체’를 정할 수 있다.

민간인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한 용어로부터 도출한 가해 주체 패킷은 대분류 9개, 중분류 12개로 도출되었다(〈표 6〉 참조). 패킷의 순서는 대체적인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랐다. ‘군’ 중분류에서 나열된 특무대, 방첩대, 보안사는 같은 기관의 시기에 따른 다른 이름이다.

〈표 6〉 가해 주체 패킷 분류체계(안)

대분류(9)	중분류(12)
군	육군
	특무대, 방첩대, 보안사
	헌병대
	신군부
	계엄군
경찰	
적대세력	인민군
	빨치산
	인민군 점령기 지방좌익
미군	
교정기관	구치소
	형무소
정보기관	중앙정보부
	안기부
대학 당국	
행정기관	
수용시설	

5.2 사건 유형 패킷

《과거사정리법》 제2조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기간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조사 범위에 따른 2기 위원회 조사국의 조직과 조사 업무 분장 내용은 〈표 7〉 과 같다. 조사1국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 군경 또는 적대세력에 의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담당한다. 조사2국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다. 조사국 내에 모두 9개 과가 있으며 사건 유형 및 발생 지역에 따라 과별 분담이 이루어진다.

〈표 7〉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국 업무 분장

조사국	조사과	업무 분장 내용
조사1국	조사1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미군·유엔군 관련 사건, 종교인 희생 사건, 국군포로 사건, 전신남북 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조사2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조사3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조사4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조사2국	조사 5과	삼청교육 피해 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 군의문사 사건 등 개별 인권침해·확정판결 사건
	조사 6과	전교조 결성 및 해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진압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개별 인권침해·조작의혹 및 확정판결 사건
	조사 7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이동 인권침해 사건,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8과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의 사건,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의문사 등 개별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과	3·15의거 관련 사건

먼저 《과거사정리법》의 진실규명 범위와 조사국 업무 분장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기간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의 4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각 범주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도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항일독립운동’ 사건은 ‘의병운동’, ‘3·1만세운동’, ‘3·1만세운동 이후 국내외 항일운동’ 유형으로 구분되고(《종합보고서》 1권, 22), 해외동포사는 별도로 유형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대분류에 반영했다.

《종합보고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미군정기, 정부수립 이후~한국전쟁 이전, 한국전쟁 초기, 인민군 점령기 및 후퇴기, 수복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에 나타나는 사건을 가해 주체(군경, 적대세력, 미군)에 따라 분류하고 각 가해 주체에 의해 일어난 사건을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서술한다. 이를 2기 위원회 조사1국 업무분장에 나타난 사건 유형과 결합하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그 유형들을 종합하여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등 3개의 범주로 종합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 통치 기간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유형을 살펴보겠다. 《종합보고서》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서술하면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4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사건을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타 사건’으로 분류된 ‘가혹행위 사건’,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녹화사업) 사건’, ‘재산권강탈사건’은 별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기 인권침해 사건 〈조사보고서〉 220건의 결정문을 검토해 부족한 용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용어는 《종합보고서》의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조작의혹 사건’ 등 10개 범주로 종합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사건 유형’ 패킷은 대분류 4개, 중분류 13개, 소분류 41개로 이루어진다(〈표 8〉 참조).

〈표 8〉 사건 유형 패킷 분류체계(안)

대분류(4)	중분류(13)	소분류(41)
항일독립운동		의병운동
		3·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이후 국내외 항일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대구10월사건 및 관련 농민봉기진압에 의한 사건
		빨치산 토벌에 의한 희생사건
		여순사건 및 관련 ‘좌익 색출’에 의한 희생 사건
		예비검속 및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제소자 희생사건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사건
		지방좌익 및 빨치산 활동에 의한 피해
		인민군 점령기의 ‘우익인사’ 및 그 가족 희생사건
		의용군 징집 등 강제연행
		종교인 희생 사건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시납북 사건
		주민 또는 피난민에 대한 공격 사건
		폭격에 의한 희생사건
		함포에 의한 희생사건
초토화식 토벌작전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기간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조작의혹 사건	간첩 및 국방경비법 위반 조작사건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사건
		재일교포 관련 간첩조작사건
		남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재북(在北) 친척 관련 간첩조작사건
	강제연행·가혹행위·구금·사망 사건	반국가단체 조작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의문사 사건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녹화사업) 사건
		미군정 포고령 위반 사건
		긴급조치 관련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좌익재소자의 사망 관련 인권침해 사건
		강제노역 사건
		부마항쟁 등 유신체제반대운동 관련 사건
		전향공작 사건
		노동운동 관련 사건
	인론탄압사건	
	개별 인권침해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
		전교조 결성 및 해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피학살자유족회사건 등 5.16직후 인권침해사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시위관련 인권침해사건	3·15의거
1986년 10·28 건국대 시위 진압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조사		
재산권 침해 사건		

5.3 가해 유형 패킷

<조사보고서>는 사건의 가해 주체와 더불어 가해 행위를 명확히 밝힌다. 그런데 국가폭력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해 행위가 복합적,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강제연행’,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형사처벌’ 등 가해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가해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강제연행·가혹행위·구금·사망 사건’ 유형으로 묶어서 서술한다. 또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의 경우 연행, 감금, 살해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주된 가해 행위인 ‘살해’를 용어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가해 행위 용어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끼리 종합하여 8개 ‘가해 유형’ 범주로 종합했다. 이 가운데 ‘신체적 가해’ 범주는 예시된 행위들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힌 바에 따랐다. ‘아동에게 부적절한 의식주’, ‘의무교육 배제’, ‘입양과정의 인권침해’는 내용상 ‘아동에 대한 가해’로 범주화했다. 그 결과 대분류 8개, 중분류 12개를 도출하였다(〈표 9〉 참조).

〈표 9〉 가해 유형 패킷 분류체계(안)

대분류(8)	중분류(12)
신체적 가해	강제연행·불법구금·고문 등 가혹행위·형사처벌
	강제수용
	강제노역
	납치
	살해
	암매장
	성폭력
	폭행
아동에 대한 가해	적절한 의료조치 미비로 인한 질병, 상해 및 후유증
	아동에게 부적절한 의식주
	의무교육 배제
재산강탈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노조활동 방해
	사찰·감시
	강제해직
	취업 금지 및 방해
	강제결혼

5.4 발생 지역 패킷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조사보고서〉에서 필수적인 규명 과제이다. 도, 광역시, 시, 군, 읍·면·동에서부터 사건 발생 지점의 지번까지 규명 가능한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범위까지 검색 조건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용자 면담 조사에서 “개별 지역이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로 묶이는 경우 있어 아쉬움(D 직원)이 있다”고 하였고, “사건발생 장소(시·도·군)”가 검색 속성으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9개 도, 83개 시, 82개 군을 바탕으로 대분류 17개, 중분류 183개를 도출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발생 지역 패킷 분류체계(안)

대분류(17)	중분류(183)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수원시 등 28시, 양평군 등 33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등 7시, 홍천군 등 11군
충청북도	청주시 등 3시, 보은군 8군
충청남도	천안시 등 8시, 금산군 등 7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6시, 완주군 등 8군
전라남도	목포시 등 5시, 담양군 등 17군
경상북도	포항시 등 10시, 의성군 등 12군
경상남도	창원시 등 8시, 의령군 등 10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5.5 발생 시기 패킷

<조사보고서>는 필수적인 규명 과제로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년·월·일, 시각까지 가능한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검색 조건으로 적절한 시간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기간’ 같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도 가능하지만 해당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적 단위는 ‘10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시점과 종점은 194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로 열어두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시기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점까지”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까지 조사개시가 가능하다. 이때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하한을 위원회 내부 합의로 노태우 정권(1993년 2월)까지로 정했다(H 조사관 추가 질의, 2015. 7. 15). 이에 따라 2021년 2기 위원회가 199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고¹⁾ “집단수용, 해외입양 일부 사건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조사개시”(H 조사관 추가 질의, 2015. 7. 15)한 사례가 있다. 이상 법적 조사 범위, 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발생 시기의 시점을 ‘1940년대 이전’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 10년 단위로 패킷을 도출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발생 시기 패킷 분류체계(안)

대분류(6)
1940년대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5.6 진실규명 결정 여부 패킷

모든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실규명 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 두 값을 포함한 ‘진실규명 결정 여부’ 패킷이 〈표 12〉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 12〉 진실규명 결정 여부 패킷 분류체계(안)

대분류(2)
진실규명 결정
진실규명불능 결정

5.7 분류 예시

이상에서 설계한 패킷 분류체계(안)를 적용하여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분류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여기에서 ‘가해 주체’는 ‘군’, ‘경찰로 복수이다. ‘사건 유형’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에서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된다. ‘가해 유형’은 ‘살해’이며, ‘발생 지역’은 ‘전북 고창군’, ‘발생 시기’는 ‘1950년대’, ‘진실규명 결정 여부’는 ‘진실규명 결정’이다.

1)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2021년 9월 15일 자) “진실화해위원회, 80·90년대 의문사 진실규명 나선다”

〈표 13〉 분류 예시 -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보고서

패킷	분류
가해 주체	군 → 육군, 경찰
사건 유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사건
가해 유형	신체적 가해 → 살해
발생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발생 시기	1950년대
진실규명 결정 여부	진실규명 결정

6. 결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가 수행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 결과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기록이라 데 의미가 있다. 이제는 전쟁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과거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조사보고서〉를 쉽고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3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면 면담조사와 함께 관련 법률, 조사국 업무 분장,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에 적합한 패킷 분류체계(안)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분류체계(안)는 6개의 패킷(‘가해 주체’, ‘사건 유형’, ‘가해 유형’, ‘발생 지역’, ‘발생 시기’, ‘진실규명 결정 여부’)으로 구성하였고, 패킷에 따라 중분류 혹은 소분류까지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담고 있는 국가폭력 사건의 다면적인 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 속성들을 다양한 접근점으로 삼아 보다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면담 조사에서는 패킷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회 홈페이지에서의 검색 및 열람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조사보고서〉 온라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고도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한 패킷 분류체계(안)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대한 분류체계 설계(안)를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진실화해위원회라는 특정 위원회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건의 속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패킷들은 사건 중심의 기록물이나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록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안된 분류체계(안)의 세부 내용은 이용자나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이용자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패킷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실제 분류 작업에 적용하여 정확성과 실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 외에도 많은 과거사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방대한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이러한 기록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과거사 위원회의 기록물까지 연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변구, 김수정 (2024). 과거사 기록을 활용한 내러티브 콘텐츠 개발 연구: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아카이브지, 7(1), 1-30. <https://doi.org/10.23089/jdca.2024.7.1.001>
- 강철호 (2021). 한시 조사기관 조사기록의 관리체계 연구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권미현 (2023). 열람서비스를 통해 본 한시기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40, 5-21.
- 김민경, 윤은하, 오효정 (2019).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법령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87-11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087>
- 김정희 (2007).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도영, 오경목 (2020).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패킷 분류 체계 연구: 1950~1979년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99-1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2.099>
- 박옥남, 오삼균, 김세영 (2009). 문화예술교육 패킷 분류체계 설계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197-21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197>
- 박지영 (2010). 시소러스를 연계한 문학류 패킷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배나경 (2008).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심지영 (2014). 패킷분석 기법을 적용한 방송자료의 내용 구조화에 관한 연구: 시사보도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3), 313-329.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313>
- 오동근 (1998).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55-76.
- 오동근 (2020). 자료조직개론. I: 분류. 대구: 태일사.
- 우지원, 이영학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67-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67>
- 윤규빈, 김다은, 장효정 (2023).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선물 검색을 위한 패킷 분류체계 개발. 기록학연구, 76, 119-157. <https://doi.org/10.20923/kjas.2023.76.119>
- 이인주 (2009).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임지훈, 박태연, 김수정 (2017). 재난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패킷 분류체계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75-399.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375>
-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기록학연구, 51, 175-208. <https://doi.org/10.20923/kjas.2017.51.175>
-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247-292. <https://doi.org/10.20923/kjas.2008.17.247>
- 정연경 (2013). 한식 정보 조직을 위한 패킷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5-37. <https://doi.org/10.4275/KSLIS.2013.47.1.015>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제19271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2010). 1기 위원회 조사보고서. 출처: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71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종합보고서 1권~4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2025). 2기 위원회 조사보고서. 출처: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716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 4. 29.).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9) -무진호 등 1972. 9. 15. 귀환. 출처: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6&nttId=32438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행년불명). 사건별 조사보고서. 출처: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716&upper_menu_no=300000&menu_no=38000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훈령 제54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Kim, Jaegwon (1995). *Supervenience and Mind: Selected Philosophical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9. 재인용: 박정희 (2005). 사건에 관한 두가지 견해. 철학논총, 41(3), 151-174.
- Nagengast, C. (1994). Violence, Terror, and the Crisis of the Stat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3, 109-136.
<http://doi.org/10.1146/annurev.an.23.100194.000545> 재인용: 홍성흡 (2007). 국가폭력 연구의 최근 경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7(1), 5-2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Na-kyung (2008). *A Study on Method of Records Management for Past History Commission*. Master's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Basic Act on the Settlement of Historical Incidents of Injustice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Act No. 19271.
- Chung, Yeon-kyoung (2013). A Study on Structure of a Faceted Classification for Organizing Korean Foo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15-37.
<https://doi.org/10.4275/KSLIS.2013.47.1.015>
- Kang, Byungu & Kim, Soojung (2024). Developing Narrative Contents Using Past History Records :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RCRK).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7(1), 1-30. <https://doi.org/10.23089/jdca.2024.7.1.001>
- Kang Cheol-ho (2021).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Temporary Investigation Agency : A Case Study of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on Humidifier Disinfectants & 4·16 Sewol Ferry Disasters*.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Korea.
- Kim, Jeonghee (2007). *A Study on Management of Investigative Records of Examination for Past Affair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Kim, Min-kyung, Youn, Eunha, & Oh, Hyo-jung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Records Management for Temporary Agencies Based on Regulations and Current Status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4), 87-11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08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on, Mi-hyeon (2023).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emporary institution records management as seen through the viewing service. *Records Management Issue Paper*, 40, 5-21.
- Lee, In-joo (2009). *A Study on Method of Records Practical Use for Truth Committee*,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 Lim, Hee yeon (2008).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The Korean Journal*

- of Archival Studies, 17, 247–292. <https://doi.org/10.20923/kjas.2008.17.247>
- Lim, Ji-hoon, Oh, Hyo-jung, & Kim, Soojung (2017). A Preliminary Study on Event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175–208. <https://doi.org/10.20923/kjas.2017.51.175>
- Lim, Ji-hoon, Park, Tae-yeon, & Kim, Soojung (2017). Development of a Facet Classification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and Shared Use of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375–399.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375>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4).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population status.
- Oh, Dong-Geun (1998). A Study on the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55–76.
- Oh, Dong-geun (2020). Introduction to data organization. I: Classification. Daegu : Taeilsa.
- Park, Do young & Oh, Kyung-mook (2020). A Study on the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Korea-related Records (1950~1979) Collected from UNESCO Archive.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99–1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2.099>
- Park, Ok-nam, Oh, Sam-gyun, & Kim, Se-young (2009). A Study of Facet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197–21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197>
- Park, Zi-young (2010). A Study on Developing a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Integrated with a Thesaurus for Literatur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Regulations on the Records and Data Managemen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struction No. 54.
- Shim, Jiyoung (2014). A Faceted Classification Analysis of TV Content : Using News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313–329.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313>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08–2010). 1st Committee Investigation Reports. Available: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717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10). Comprehensive Report Vols. 1–4.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22–2025). 2nd Committee Investigation Reports. Available: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717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25, April 29). The Investigation Report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Abducted Fishermen (9) – Mujinho et al., Returned September 15, 1972. Available: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6&nttId=324384#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n.d.). Investigation Reports by Incident. Available: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716&upper_menu_no=300000&menu_no=380000
- Woo, Jee-won & Lee, Young-hak (2011). A Study on Establishing Measure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In Past History Commiss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67–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67>
- Yoon, Gyubin, Kim, Daeun & Jang, Hyo-jeong (2023). Development of a Facet Classification System for Presidential Gift Search in Presidenti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6, 119–157. <https://doi.org/10.20923/kjas.2023.76.119>